

| | |
|-------|-----------|
| 의안번호 | 제274호 |
| 의결연월일 | 2006.4.11 |

예산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3. 29 예산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4. 4

다. 상 정 일 자 : 2006. 4. 10

제13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재무과장 : 고영세)

가. 제안이유

- 2006. 1. 1부터 지방계약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심의 범위 및 심의대상 금액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법 제32조)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행령 제106조)
 -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정낙춘)

-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계약법률이 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공사의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시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 중 3호로 정하고 있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군의 경우 64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도 다양하고 많아서 모든 단체에서 추천시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추천분야를 한정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관련분야 중에서 택일 추천토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 안 제2조중 6호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군 관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참가자 자격, 낙찰자 결정 방법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적인 취지와 상충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조례안중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과 “주민참여 대상공사”를 영 제 108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안 제12조로 다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의 근거조항은 다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안 제6조(소위원회)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 i)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도록 명정하고 있는 반면, 계약심의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며,

ii)제⑥항중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전체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할 권한을 전부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iii)또한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전체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도 누락 됐다고 보여지며,

iv)제④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1인의 위원장이 여러 개의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영 제60조제②항에 의거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안 제12조(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로 근거내용을 정리하면서 상한금액을 정하지 않음.
- 위원회 개최후 심의 의결 내용에 대한 회의록 작성.비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근거 조항이 없음.

4. 질의 ·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